

# 환경중시 새 천년시대의 우리 기업과 정부의 과제

## - 산업계에서 바라본 시각 -

김경덕 원장 (현대환경연구원, 기술사)

I. 세계 환경여건의 변화
II. 기업과 정부의 과제
1. 기  업
2. 정  부
III. 결  언

### I. 세계 환경여건의 변화

독일의 세계적 환경 학자이며 운동가인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제커에 따르면 21세기에는 환경 또는 자연자원의 희소성이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약 요소가 될 것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량 생산과 소비 체제 즉 무분별한 자연개발 및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과 낭비적인 생활양식의 보편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은 생태계 파괴와 전 지구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고갈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 자원이 유한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은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국가의 경우 계속되는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문화

의 확산으로 구현될 것이다. 기술혁신이 모든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인류의 믿음이 지구 환경문제의 급속한 악화로 비현실적임이 밝혀지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가치관의 전환”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물질적 측면에만 눈이 어두워 생산 확대에만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물질 이외의 정신적 측면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곧 “자연은 유한하다”는 인식과 “자연과의 대화와 교류”를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 이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에서 지구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새로운 생활 스타일과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환경을 배려한 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중시 문화는 우선 현 세대는 후 세대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연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의 등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개발은 최소 한도로 억제된다든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든지 하는 더욱 까다로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이 밖에 유한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도 이 같은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환경을 배려한 이른바 ‘녹색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움직임도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의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품이 환경을 배려한 상품인가 아닌가를 구매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를 ‘녹색 소비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8년 영국에서 ‘녹색 소비자 지침’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이후이다. 이 가이드북은 소매점에서 팔리는 상품이 환경을 배려한 상품인지 여부를 해설한 것으로 상품의 매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이러한 ‘녹색 소비자’들은 단순히 광고 뿐 아니라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가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되고 있는지, 제조공정과 판매활동 등 기업활동 전체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적당히 상품의 이미지 향상만을 노린 기업활동 만으로는 경영에 성공하기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녹색 상품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녹색상품 구매 네트워크’가 금년에 창설되는 등 녹색상품 운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21세기에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로 등장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대두될 것임을 시사한다.

첫째,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더욱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을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을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기도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협상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었으나 머지 않은 장래에 또 다시 국제정치 무대의 일선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도국들도 선진국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범지구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얼 협정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환경효율성 증대를 통한 환경과 자연자원의 소비 억제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는 인간에 의한 모든 생산활동과 소비행위에 투입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면 인류의 복지수준을 축소하지 않고도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공장이나 주택 건설, 연비가 높은 자동차 개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개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해 연료사용을 줄이는 것 등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바이츠제커의 주장이다(중앙일보, 1999. 10. 26. 문화인터뷰).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규제 정책은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산업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극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대하는 우리 기업들의 자세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도 보다 합리적으로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도 더욱 개선되어 산업계의 환경경영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의 환경활동도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간의 적

절한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는 환경중시 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기업과 정부의 과제

### 1. 기 업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의식의 확산과 각종 환경단체 등으로 부터의 환경보호 압력 증가 등 일련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업이 커다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계적(global) 및 각국의 환경규제에 적절하지 못하는 기업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 부족은 환경에 적대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켜 매출 감소 등 시장을 통해 받는 영향 이외에도 직원의 노동의욕 감소, 유능한 인재확보 곤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많은 영향을 받게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의식의 증대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는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미국 버거킹은 중남미 열대우림을 개발한 목장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불매운동을 당한 적이 있다. 미국 화학회사인 유니온 카바이드 사는 1984년 12월 중부 인도의 건조한 농업지역인 보팔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막대한 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계에서 최악의 환경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상당한 판매실적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지난 90년대 초에 발생한 패놀 유출 사고 이후 높아진 환경 의식과 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사고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오늘날에는 기업의 윤리적인 자세, 즉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와 인간 존중, 적극적인 사회공헌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새로운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투자대상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한다는 발상을 갖고 경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기업은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이러한 기본 방침 하에서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환경경영 면에 있어서 이들 기업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세밀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경영 방안이 최고 경영자들의 강력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환경문제를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경영의 모든 부문에 환경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체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법규 강화와 소비자들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셋째,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환경 혁신적 전략 추진을 도모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사업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발적이기보다는 다양한 기업 외적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 급변하는 세계 환경여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경영 패러다임의 변환을 서둘러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정 부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단 환경악화를 막기 위해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 정책의 보다 합리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환경정책은 기업 등 규제대상으로 하여금 적절한 환경오염 방지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부 명령통제식 법규의 경우 WHO 권고안 또는 외국 입법예를 참조하여 작

성되는 등 환경적 요소 이외에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규제 준수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료사용 규제, VOC 규제, 최적방지설비 도입, TMS 설치 운영, 야외연마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이동식 집진장치 설치 및 운영을 거대한 선박건조 작업에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기업이 언제든지 규제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평소에는 현장 감독관청에서도 엄격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하지 않다가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으로 적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감독기관의 부패의 소지를 제공한다.

셋째, 일부 규제 조치의 경우 합리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 등이다.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최종 오염 배출 양과 농도이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은 해당 기업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가지 목적을 위해 동일한 대상에 다양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청정연료 등 특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연안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육상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충분히 적정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발생원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으로 또 다시 규제하는 것도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라 볼 수 있다.

다섯째,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규제기준을 위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일시적인 규제위반도 고의적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와 같은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 및 재정적 투자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고의적인 이유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의적인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환경오염이 많은 소규모 업체 또는 서비스업에 의한 고의적 위반행위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고의성 있는 환경오

염을 방지하는 것이 자연환경 개선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책은 오염 예방활동 과정을 일일이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단순·명료하고 기업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오염예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Ⅲ. 결 언

세계는 바야흐로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인류사회가 과거 수백년 간 이루어 왔던 변화보다 최근 수십년 동안 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오는 21세기에는 경제·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새 천년에는 교통·통신의 고도화로 세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크게 좁아지면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경제면에서 탈국경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환경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정부나 기업이 다 같이 신속히 대응하여 변화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글로벌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는 2년 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사실상 이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환경문제는 더욱 심화됨으로써 커다란 사회 문제화 하고 있다.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어 환경문제의 대응능력에 있어 우리 나라와 선진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들어섬으로써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따라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선진국 정부 또는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맞는 정책 방향과 환경경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우리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마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